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장성택 모든 직무 해임...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종합)(12/0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발표한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는 장성택에 대해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쪼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밝힌.
- 중앙통신은 특히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어엮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고 밝혀 장 부위원장이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4~5월 개성공단 폐쇄과정에서 군부의 조치에 반대입장을 밝혀 충돌했을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을 뒷받침함.

● 北, 노동신문 1면에 '장성택 숙청' 보도(12/0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실을 크게 보도하며 1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라는 제목으로 전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장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전함.
- 신문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장성택이 감행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그 해독성, 반동성이 날날이 폭로되었다"며 장 부위원장이 분파를 형성하고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젖어 부정부패했다는 등 구체적 해임 사유를 열거함.

● 北 김정은, 건설일꾼에 서한... "건설 대변영기 열자"(12/0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8일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건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 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건설 투쟁'을 독려함.
- 더하여 그는 이번 대강습이 "건설 부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혁명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구상과 발기에 따라 마련됐다"라며 건설일꾼과 근로



자들을 '강성부흥'의 임무를 띤 "척후대, 개척자"라고 치켜세움.

- **조선신보 "北 주민들 '장성택 숙청' 전폭 지지"(12/09, 조선신보)**
 - 북한 주민들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반당 반혁명 종파주의자'로 규정하고 숙청한 노동당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장성택 숙청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시대부터 책임있는 위치에 등용됐던 자가 저지른 배신행위는 용납 못할 만고대죄"라며 장성택을 '현대판 종파'로 규정하며 장성택 숙청이 "일심단결의 기운을 더욱 세차게 분출시키는 계기로 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함.
- **北 "전기료에 처넣고 싶다"...장성택 비판 여론몰이(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장성택의 해임을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소식이 전체 당원과 주민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 신문 4면을 모두 채운 글에는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대학, 지방당 등에 소속된 10여 명이 나와 장성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에 도전했다며 가시돋친 비난을 쏟아냄.
- **北신문 "김정은 중심으로 단결"...유일체제 연일 강조(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둘레)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장성택 일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비난하며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유일적 영도체제를 확립할 것을 역설함.
 - 신문은 장성택의 숙청이 결정된 이번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라며 "우리 당 대열에 우연히 끼여든 불순분자, 현대판 종파들이 적발 숙청됨으로써 우리 당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더욱 강화되게 됐다"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일 이어 김정은에도 '위대한 영도자' 호칭(12/10,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는 북한 매체가 발행한 사진과 조선중앙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김 제1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지칭한 현수막과 구호가 포착됐으며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의 사진에서 회의장 정면 벽면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대형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일 '금고지기' 리수용 처형(12/11, 마이니치(毎日)신문)**

 - 최근 '숙청'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리수용 노동당 부부장이 처형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1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지도부와 가까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리 부부장이 장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처형됐다고 중국 베이징발로 전했다. 장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처형된 인물은 당 행정부 이용하 제1부부장이거나 장수길 부부장, 관련 조직의 과장급 2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라고 덧붙였다.

- **北김정은 '張 숙청' 후 첫 활동...의료일꾼에 '감사'(12/1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1일 오전 6시 뉴스에서 김 제1위원장이 사경에 처했던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을 치료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일꾼(간부)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함.
 - 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일꾼들은 지난 4월 강원도의 세포동관 축산기지를 건설하다가 심하게 다친 인민내무군 군인 6명을 평양으로 후송한 뒤 최근 치료를 마쳤으며 200일이 넘는 입원기간 군인들에게 쓰인 약과 영양제, 보약 등은 헤아릴 수 없다며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함.

- **北, 연일 장성택 비판 여론몰이... "일심단결" 강조(1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에 장성택의 숙청이 결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접한 반향이라며 김평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당·정·군 간부 4명의 명의로 된 글을 게재함.
 - 김평해 비서는 "현대판 종파이며 우리 당 대열에 우연히 끼어든 불순분자들인 장성택 일당이 적발숙청됨으로써 우리 혁명 대오는 더욱 순결해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천백 배로 다져졌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함.

- **北신문 '김정은 결사옹위' 촉구... "목숨바쳐 사수하자"(1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에도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거듭 강조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독려함.
 - 신문은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라는 제목의 1면 정론에서 '장성택 일당' 숙청으로 '혁명의 대오'가 순결해졌다며 "우리의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 바쳐 사수하자", "김정은 결사옹위의 성새를 더 굳건히 다지자"라고 촉구함.

- **北, 김정일 2주기 추모행사 본격 돌입(종합)(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일 동지 서거 2돌에 즈음해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했다"라며 미술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안동춘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 전함.
- 더하여 김정일 위원장 2주기를 맞아 각 근로단체가 잇따라 결의모임을 열고 "김정일 대원수를 영원히 높이 모시며 김정은 원수의 두리(주위)에 뭉쳐 강성국가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힘.
- **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종합)(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힘.
 - 더하여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함.
 - **北 매체, 장성택 사형 집행 대대적 보도(종합)(12/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2면에 '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전날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장성택에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뒤 즉시 집행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판결문에 대해 "반당반혁명 종파분자이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인 장성택의 머리 우에(위에) 내려진 증오와 격분에 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철추"라며 규정함.
 - 이어 장성택을 북한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인물로 규정한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의 장면을 담은 사진 두 장도 게재하여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 모습도 밝힘.
 - **김정은 내년 생일도 평일... '김정일 대원수일' 휴일로(12/13,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1월8일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평일'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원수로 추대된 2월14일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평양출판사' 발간의 '주체 103(2014)년' 달력에는 1월8일이 평일인 검은색으로 표기됐고 올해 달력과 마찬가지로 달력의 어디에도 김 제1위원장의 생일에 대한 표기나 설명이 없음.
 - **北, 중앙통신 상보 통해 김정은 '건설 업적' 부각(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연말을 맞아 13일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발표해 올해 건설분야에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을



- 령'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공로가 있는 간부와 군인들에게 '김정일훈장', '노력영웅', '김정일상' 등을 수여했다고 보도함.
- 북한이 밝힌 각종 표창과 명예칭호 수상자는 모두 159명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건설부문일꾼대강습 참석자들인 것으로 보임
 - 김정일훈장은 김정관·서재국 군 장성, 노력영웅은 채건 등 16명, 김정일상은 리풍순·박민열에게 수여됨.
- **장성택 처형 속 北 '빨치산 혈통' 김국태 사망(종합)(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이자 최측근이었던 김책의 장남인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이 13일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밝힘.
 - 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 명의로 김국태 사망에 관한 부고를 발표, 그가 "급성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12월 13일 18시 20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전함.
 - 장의위에는 지난 12일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와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포함됨.
- **北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시찰...이틀째 공개활동(12/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마식령스키장을 찾아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강추위 속에서도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며 연내 완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힘.
- **北 김경희·지재룡 견재한 듯...김정은 이틀째 공개활동(종합)(12/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앞두고 이달 12일과 13일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차례로 열린 영화감상회와 재중 항일혁명 투사들의 회고모임에 지재룡 대사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빨치산 혈통' 김국태 영전에 회환(1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3일 숨진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의 영전에 15일 회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김국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회환을 보내시었다" 라고 전함.



■ 김정은동향

- 12/10,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 일꾼들의 '사경에 처했던 군인들 완치 소행'에 감사 전달(12.10, 중통·중방)
- 12/14,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 현지지도(12.14, 중통·중·평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황병서(黨 부부장)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12.15, 중통·중·평방)
 - 황병서, 마원춘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黨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12.8 장성택과 일당에 대한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와 관련한 문제 토의를 열고 '장성택의 모든 직무해임과 일체 칭호박탈, 출당 및 제명시킬 데 대해 결정서' 채택(12.9, 중통·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12.8 평양체육관에서 개강(12.9,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보고), 최룡해, 곽범기(黨비서, 개강사) 등 참가
-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며 '쑤민은 '김정은 사상·노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 것' 강조(12.10, 중방·평방·노동신문·중통/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나아가자)
 - '장성택 숙청, 黨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 관련 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등 각계층 인민들의 '장성택의 배은망덕한 범죄행위, 양봉음위·종파행위는 최악중의 최악' 등으로 성토 및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에 충성 결의' 반향 집중 보도(12.10, 중방·평방·중통)
-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12.12 장성택 北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12.13, 중통·중방)
 - 특별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었음.
- 2013년에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은하과학자거리·미림승마구락부' 등을 거론하며 "2013년은 김정은 시대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며 '김정은 건설업적' 칭송(12.12, 중통·평방·노동신문/김정은시대에 펼쳐진 건설의 최전성기)
 - '조국의 땅위에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다'며 '김정은 시대에 천리마 정신과 1970년대 속도전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21세기 새로운 대비약 속도를 창조한 천만군민의 투쟁열의는 날로 충전해지고 있다'고 강조(12.12, 중통/위대한 시대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여온 강성국가건설의 대진군)



- **【김정일 2주기(12.17) 관련 동향】**
 - 중앙미술전시회, 12.12 김기남(당중앙위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안동춘(「문예총」 중앙위 위원장) 참가下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12.12,중통)
 -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결의모임, 12.12 리영수(당중앙위 부장)·김진하(평양시 당위 비서)·노성실(「여맹」 중앙위 위원장/보고) 참가下 여성회관에서 진행(12.12,중방·평방)
 - 근로단체들의 결의모임과 맹세모임, 12.12 리영수(당중앙위 부장) 참가下 각각 진행(12.12,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12.13)】** 김정은은 올 한해 '100여차에 걸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18회) 현지지도 등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었다'며 '김정은의 건설영도 및 업적 칭송과 2013년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 소개 선전(12.13,중통)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 건설
 - 올해 전국 각지 일꾼-근로자들의 '△5억9,000여 그루 植樹, △강하천 1,590여km 정리, △도로 1,200여km 개건 및 100여km 건설, △40여개 대상 제방공사 진행, △강하천 220여개 정리' 등 "올해 국토관리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선전(12.13,중통)
 - 능라인민유원지·평양민속공원·미림승마구락부·은하과학자거리 등 '김정은 손길아래 건설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인민봉사기지'라고 '김정은의 애민사상' 칭송(12.13,평방/인민을 위해 솟아난 사랑의 창조물들)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완료 및 폐강식, 12.13 박봉주(내각 총리)·최룡해(軍 총정치국장)·곽범기(黨 비서)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2.13,중통·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을 위한 부문별 실무강습, 12.13 평양에서 진행(12.13,중통·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12.13 은하과학자거리 참관(12.13,중방)
 -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 생일축하(*김정은, 생일상 전달)모임, 12.13 곽범기·김인식(내각 부총리)·김영호(내각 사무장) 등 참가下 4.25여관에서 진행(12.14,중방)
- 국가표창수여식, 12.14 김영남·박봉주·최룡해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2.14,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軍장병들과 근로자들, 일꾼들에게 표창
 - 그밖에 '김정일훈장', '시계표창', '노력영웅칭호와 금메달 및 국기훈장' 등을 200여명에게 수여
- 黨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2.13 '김국태'(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黨 검열위원장, 89세) 사망에 대한 부고 공동명의로 발표(12.14, 중통)



- 급성심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12.13, 18:20 사망
- 黨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장의식은 '국장'으로 한다며 '국가장의위' 구성(12.14, 중통)
- 김영남(장의위원장),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최부일, 김창섭, 로두철, 조연준, 태종수, 최영림, 현철해, 리병삼, 주규창, 리영수, 백계룡, 한광복, 오일정, 김정임, 김종협, 한광상, 김경옥, 리재일, 최 휘, 김만성, 전일춘, 정명학, 김히택, 백룡천, 홍인범, 리만건, 오수용, 박영호, 박태덕, 김춘섭, 박정남, 리상원, 강양모, 림경만
- 조객은 12월 15일 10시부터 19시까지 맞으며, 발인은 12월 16일 8시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노동신문, 만델라 생애 소개…"반인종주의 공헌"**(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추모식이 열리는 10일 '반인종주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한 넬슨 만델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5일 타계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생애를 자세히 소개함.
 - 신문은 만델라 전 대통령의 출생에서부터 인종차별 투쟁 이력과 그 과정에서 겪은 고초, 대통령 당선과 은퇴 후 인도주의 활동까지 두루 다루며 특히 "우리 인민은 남아프리카 인민이 낳은 훌륭한 아들인 넬슨 만델라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매우 애석한 마음으로 접하고 있다"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함.
- **중국인 북한관광 급감…"정세 긴장 영향"**(12/1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1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지린(吉林)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북한관광 여행자들은 올해 겨울철 들어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힘.
 - 옌지시의 한 국제여행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으로 가는 관광수속을 밟아준 고객이 10여 명에 불과하다"며 "예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함.
- **北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아시아국가와 협조가 우선"**(12/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원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지난 9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의회 회의 제6차총회 연설에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 ECHO는 지난 7~8월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 5천 명을 지원하는 등 국제기구와 민간 구호단체에 대북사업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함.
- **北 중앙통신, 美에 '적대시 정책' 철회 촉구(12/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을 발표한 13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에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함.
 - 중앙통신은 북한의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 한미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올해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고 있다고 비난함.
 - 더하여 "미국이 지금까지 조선에 가해온 각종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 등 적대정책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쟁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로 떠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함.
- **北 외무성 리광남 일행, 中 외교부 장쿤성 면담(12/13,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의례국(의전국)장 리광남 일행이 12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의 장쿤성(張昆生) 부장조리(차관보)를 면담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광남 일행은 장쿤성과 만나기 전 중국 외교부 의전부문과 함께 업무를 협의함.
- **중국 내 북한 무역일꾼 대거 귀국(12/14, 연합뉴스)**
 - 14일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거래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랴오닝성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지에 파견한 무역일꾼들이 최근 줄줄이 본국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張 측근 이재룡 주중 北대사 건재...北 공개활동 보도(12/15, 조선방송; 평양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앞두고 이달 13일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진행된 재중 항일혁명 투사와 그 가족들의 회고모임에 지 대사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보도함.
- **中여행사, 김정은 생일기념 농구경기 관람상품 판매(12/15,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 베이징에 있는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1월8일 열릴 농구경기 관람권 12장을 독점확보하고 판매에 들어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5일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내년 1월 북한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농구경기를 볼 수 있는 상품이 약 1천만원에 판매됨.

● 北 고위관리 "장성택 처형 후 경제정책 변화없어"(종합2보)(12/15, AP통신)

-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경제개발구 설치 등 기존의 개방적 경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북한 고위관리가 발언했다고 15일 AP통신이 전함.
-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운영석 국장은 15일 평양에서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 관련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 미사일위협에 대응한 韓美공동전략 수립 관련 '미국의 변함없는 반공화국 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로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맹강화를 떠들며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계속 추구한다면 긴장격화의 장본인으로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12.8, 중통·노동신문·평방/선제공격을 꺾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 【중통 논평】 미국이 우리 軍에 '공중급유기(F-15K)와 최신 '스텔스기'(F-35K) 판매에 대해 '남북대결을 더욱 부추기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미국은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할 자격도 체면도 없는 비열한 자들'이라고 비난(12.9, 중통·노동신문/평화와 안정을 논할 체면이나 있는가)
- 일본 수상·국회·방위상도 모르는 '육상자위대 비밀정보부대 존재·활동(美 육군 지휘, 北·中·러 등 군사정보 수집)' 폭로 및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다그치며 재침의 칼을 버리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망동"이라고 비난(12.10, 중통·노동신문/사무라이 후예들의 분수없는 망동)
-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北·인도·베트남 등 83개국, 5,000여명 참가), 12.7 에콰도르에서 개막(12.10, 중통·평방)
- '김완수' 부의장(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 12.9 파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의회 회의 제6차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아시아 나라들과의 협조를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2.11, 중통)
- 駐北 인도 대사, 12.12 '北-인도 외교관계설정' 40주년 즈음 박의춘(외무상)·박근광(당중앙위 부부장)·박길연(외무성 부상)·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초대下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12.12, 중통)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조평통, 南 첨단무기 구매계획 비난…"대결책동"(12/1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한 정부의 첨단무기 도입 계획에 대해 "군사적 대결책동"이라고 비난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서기국 '보도'에서 남한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 등의 첨단 전쟁장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는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정세를 참예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주장함.
- **北매체, '張 처형' 관련 "南의 악담질은 특대형 도발"(12/15,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며 김정은 유일체제를 비난하는 세력에는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겠다고 위협함.
 - '그 어떤 쓸라닥질도 역사의 전진은 멈춰세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내부 불순세력들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겼듯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에 대해 시비질하거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괴뢰보수패당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남)

- 대통령의 감사원장·검찰총장·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독재자의 오만무례한 정치깡패행위"라고 비난하며 '측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날로 악화되는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12.9,중통·민주조선/측근들을 장관들로 임명한 남조선 집권자의 속심)
-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언(내정간섭, 대남비난공세 등)에 대해 '종북소동을 정당화하고 反정부 투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이라고 재차 비난하며 '괴뢰 패당은 민심의 요구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12.9,평방/파렴치한 여론기만 책동)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56호(12.12)】 우리 軍의 첨단무기(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도입 계획에 대해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며 "군사적 대결책동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단호히 짓뭇개 버릴 것"이라고 위협(12.12,중통·중방)
- 혈세를 탕진하며 전쟁장비 도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동족대결을 한층 더 격화시키는 한편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임.



- '천안함' 제19차 공판(12.9, 서울중앙지법)에서 '음향탐지수' 증언(침몰 때까지 아무런 음파도 들리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천안함 침몰 당시 어뢰공격이 없었다는 것이 다시금 새로 확인되었다'고 주장 (12.12,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우다웨이 中 6자회담 대표 내주 러시아 방문”>(12/10, 연합뉴스)
 -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9일(현지 시간)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해 데이비스 특별 대표와 협상 과정(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다음 주에는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모스크바에서 만나 이 문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처럼 우리는 현재 협상 과정 재개 방안 모색을 위해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통해, 지난달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작에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러시아는 이밖에도 남북러 가스관을 건설해 자국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과 극동 지역의 잉여 전력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에도 여전히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세이모어 "장성택 숙청 잔혹...한반도 불안정성 커져">(12/12, 연합뉴스)
 -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아산정책연구원과 CSIS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김정은은 장성택을 숙청한 방식으로 대미, 대남 접근태도를 취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 그는 특히 "이번 일로 인해 북한 내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강경파 인사들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김정은이 영리하기 때문에 실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발 등을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김정은 정권이 핵을 일종의 '보험정책'으로 쓰고 있다면 6자회담에 참여하는 나머지 5자가 '보험료'를 크게 올려 정권의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면 김정은은 근본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전문가 "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조건없는 대화해야">(12/12, 연합뉴스)
 - 프랭크 자누지 국제앰네스티(AI) 워싱턴DC 사무소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은 물론



어떤 나라도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평화협상을 하자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를 '항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과거 유럽 통합의 기반이 됐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접근을 언급하며 북한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헬싱키식 대화전략은 6자회담의 틀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전제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자누지 소장은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에서 한국팀장을 지냈으며, 이에 앞서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북한과 미얀마의 인권보호법(Jade Act) 성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통'으로 알려져 있음.

나. 미·북 관계

- <美, '장성택 사형'에 이례적 '초강경' 비난...배경은>(12/13, 연합뉴스)
 -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장성택 사형 집행' 긴급뉴스가 전해진 지 1시간여만인 12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께 동시에 논평을 내놓고 "만일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잔인함(extreme brutality)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음.
 - 통상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정치사건에 대해 내부 문제라며 논평을 자제해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극단적 잔인함'이라는 표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이번 사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북한이 취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점검 중이며, 특히 중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北내부상황 협의 강화...비핵화 정책 불변">(12/14,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심 대북 정책은 바뀐 게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논의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뿐 아니라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현 상황을 평가하고 논의의 진전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북한의 내부 정책 결정이나 특정 사건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추측



이나 분석을 내놓지 않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잔학 행위이고 세상에서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 없을 것〉(12/10, 미국의소리)

-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분쟁 중재기구인 국제위기감시그룹이 9일 '성문에만 불: 중국은 왜 북한을 계속 가까이 두는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깊은 불신이 비핵화와 관련한 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에 널리 퍼진 견해 가운데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중국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 불안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또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만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음.

● 〈中 전문가 "장성택 처형, 중북관계에 영향 없어"〉(12/13, 연합뉴스)

-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이 앞으로 중북관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일단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연구부 왕권성 박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성택은 확실히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중북관계 등 외교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류장용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도 동일한 평가를 했으며, 장성택이 주도해 온 경제 특구 설립 등 중국을 활용한 경제개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경제개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발전 노력은 지속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음.
- 그러나 홍콩의 친 중국계 신문인 대공보는 이번 사건으로 북한 정국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고 중국과 북한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음.

라. 일·북 관계

● 〈日 전문가들, 북한 권력체제 향방에 '촉각'〉(12/13, 연합뉴스)

- 히라이와 순지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



성택 숙청이 노동당과 군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한 정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남북·일북 관계 등에 대해서는 "군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 한 '장성택 그룹'이 배제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기본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음.
- 반면 일본 공산당 기관지 이카하타의 전 평양 특파원 하기와라 료씨는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개혁개방과 군사강화의 두 노선 간에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장성택 처형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닌 두 노선 간의 비극적인 투쟁 결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음.
- 하기와라씨는 "장성택은 어떻게 보면 개방파의 한 상징적 리더"라면서 "북한내에는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저변 세력이 상당하고 인민들도 '선군정치'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음.

마. 기 타

- <美전문가 "장성택 숙청, 김정은 체제 약화시킬 수도">(12/10,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9일(현지시간) "장성택에 대한 숙청을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 숙청이 북한 권력의 양대 축인 군과 당의 균형을 붕괴시키면 북한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스캇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원장은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위험은 내부로부터 나온다"면서 "김정은의 발걸음이 권력 기반을 부식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연구원은 "지난 해 리용호 총참모장에 이은 장성택의 숙청은 북한의 권력 이행이 순조롭지 않고 심각한 내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위험한 것은 북한이 통제력 부족을 외부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음.
 - WSJ는 한국 관리들도 장성택의 숙청 이후 북한의 도발과 불안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국무부 "한국 방공구역은 중국과 다르다">(12/1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와 관련해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보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는 중국이 취한 조치와 다르다"고 밝혔다.



-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든게 아니라 조정·보완한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책임있고 신중하게 추구했다"고 평가했음.
 - 사키 대변인은 이어 "아마도 이번 조치는 주변국과의 사전 협력과 조율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민항기의 운항과 관련한 혼란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韓, TPP 협상참여 힘들 듯...>정부, 양자협상에 주력>(12/13, 연합뉴스)
-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12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 게임' 단계"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협상은 일종의 룰 협상으로, 일정상 지금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국내시장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룰 협상보다는 상품협상이기 때문에 TPP 참가국과의 양자간 상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음.
 -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은 높은 수준의 FTA 이행에 합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TPP 멤버가 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FTA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양자 간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때 '北 핵·미사일' 핵심변수>(12/13,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 연합실무단 첫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전작권 전환시기 평가의 핵심변수로 고려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연합실무단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틀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며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양국의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음.
 -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전환시기에 대한 최종 합의는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음.
- <한미, 방위비분담 '끝장 협상'...최종 답판 진통>(12/14,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를 10~11일에 이어 14일 오전 회의를 속개하고 최종 타결을 시도했음.
 -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도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 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음.

- 총액이나 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양측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미는 이들 쟁점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일괄 타결할 가능성도 있음.
- 한미 양국은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 이번 9차 협의에서 결론을 내는 목표로 사실상 '끝장 협상'에 돌입한 상태이며,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협정문안 작성 협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중 관계

● <中, 韓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유감'>(12/9,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즉각 한국에 우리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이 타당·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음.
- 중국은 지난달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관련 논란을 촉발한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줄곧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으며, 이와 함께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음.

● <국적 항공사 "중국에 비행계획서 제출했다">(12/12, 연합뉴스)

-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가 12일 허용하자 항공사들은 곧바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냈음.
-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1일 기자단 송년 만찬간담회에서 "국적 항공기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제부터 제출할 것인지도 항공고시보에 나온 절차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후에는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이어도 동남방 해상서 한·일 해군 수색·구조 훈련>(12/12, 연합뉴스)

- 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어도 동남방 해상에서 "한·일 해군의 구축함 4척이 참가하는 수색 및 구조훈련이 실시됐다"며 "우리 링스헬기 2대와 일본 측 시호크(SH-60) 헬기 2대도 참가했다"고 밝혔음.
- 이날 한·일 해상훈련이 실시된 이어도 동남방 해상은 우리 작전구역(AO) 외곽이면서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일부 중첩되는 지역임.



- 한·일 수색 및 구조 훈련은 1999년 이후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훈련 과정에서 헬기도 운용했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 측에는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음.
 - 13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중국의 영토·영공 안전을 수호 의지를 밝혔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 <日 "한일방공구역 중첩지역관리 전용선 활용">(12/12, 연합뉴스)
- NHK는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이날 자민당 회의에서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 양국간 기존 통신선을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운용 방법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방위성 당국자는 이전부터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과 자위대가 전용 통신회선을 활용해 문제를 방지해왔으며, 최근 한국이 확대하기로 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자민당 의원은 일본도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약 1천km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위성은 레이더 탐지범위의 한계, 전투기의 항속 거리 문제 등 때문에 즉시 확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음.
- <정부 "日,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 부당주장 접어야">(12/12, 연합뉴스)
- 외교부는 1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에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버전으로 추가 배포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없는 문제를 갖고 일본은 부당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밝혔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에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며, 이런 도발 행위의 반복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우리 정부의 독도 동영상 배포 계획에 대해 "한국어를 필두로 외국어 동영상도 게재될 것"이라면서 "최초로 올라가는 것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음.
- <日 국가안보전략 독도 문제 명기... "외교적 노력 지속">(12/14, 연합뉴스)
- 13일 교도통신이 미리 입수해 보도한 국가안보전략 문안에 따르면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준해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음.
 - 이는 결국 독도를 점령하기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은 배제하되, 한국과의 외교협상과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임.

-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로 명기, 이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는 사태의 악화를 피하고, 자제를 요구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음.
-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미·중 관계

● <중국, 미국 주도 TPP에 초지일관 '신중 모드'(12/9,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희망한다며 관심을 나타냈지만 실제 가입 여부에 대해선 일절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음.
- 최근 한국의 TPP 가입 관심 표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가 "한중 자유 무역협정(FTA)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전부임.
- 9일 코트라가 그동안의 중국 언론보도를 종합한 결과 중국은 아직 TPP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확신하지 못해 협상 참여를 망설이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이 설사 TPP 협상에 참여한다고 해도 기존 협상 참여국들이 모두 중국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임.

● <미국 "중국 방공식별구역 여전히 인정 못해"(12/13, 연합뉴스)>

- 마리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방침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것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내 항공사가 CADIZ를 통과하는 민항기의 비행 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음.
-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의 최근 발표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검해 보겠다"면서도 한·미 양국이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주중 미국대사 "재균형전략, 中포위전략 아니다"(12/15,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게리 로크(63) 중국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2013년 썬야재정경제국제포럼'의 강연에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수호하길 원한다"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더욱 교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로크 대사는 "중국의 많은 이들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로의 이동전략을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굴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이것은 중미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중국 승리가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부연했음.

마. 미·일 관계

● <아베-바이든, 中방공식별구역 공조 강화 재확인>(12/13, 연합뉴스)

-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재차 확인했음.
- 바이든 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최근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국 측이 중국의 방공식별권 설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6일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베 총리와 회담한다면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전달했다고 함.
- 한편 13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 미일안보 조약상의 방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음.

바. 중·일 관계

● <中 8일 연속 '센카쿠' 순찰... '주권 시위' 의도>(12/9, 연합뉴스)

- 중국 국가해양국은 8일 중국 해경 선박 3척이 편대를 이뤄 다표위다오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 일본 언론도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이들 중국 해경 선박 3척이 8일 오전 9시 안팎에 센카쿠 해역에 나타나 3시간가량 항해하다가 사라졌으며, 중국 해경 선박의 센카쿠 해역 진입은 8일 연속으로 계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달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분쟁해역에서 '주권 시위'를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임.

● <中 "현상변경 시도 당사자는 일본">(12/11,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강압'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다오위다오와 동해 문제에서 시비를 제기하고 현상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일본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중국은 앞으로도 국제법 등에 따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유효한 관리·감독'을 진행하면서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서 유관 국가와 기술적 문제 및 유관공역에서의 비행 절차와 안전에 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은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도발을 중단하고, 억지스러운 말썽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음.

- 한편 홍 대변인은 일본이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에 센카쿠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를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은 공연히 '중국위협론' 조성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 기. 타

● <中, 한반도 근접 산둥반도서 대규모 군사훈련>(12/8, 연합뉴스)

- 홍콩 동방일보는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군구 산하 육·해·공군과 미사일부대인 제2포병 등 모든 군종이 참여한 가운데 산둥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행했다고 보도했음.
- 동방일보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들 훈련은 관련국들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했음.
- 황둥 마카오 국제군사학회 회장은 중국의 잦은 군사훈련은 주변국들에 중국의 훈련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으며, 특히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소규모 국가들이 중국의 훈련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분쟁지역을 급습해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국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사전략이라고 분석했음.

● <軍 "中·일에 이르면 연내 방공구역 협의 제안">(12/9, 연합뉴스)

- 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협조회의가 10일 오후 2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으며, 한 관계자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확대된 KADIZ가 발효되기까지 관보 및 항공고시보 게재 등의 행정절차를 논의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제안할 것"이라며 "다행히 한·중·일 3국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TPP 협상 연내 타결 사실상 무산>(12/10, 연합뉴스)

- 일본 교도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PP 협상이 내년 초에나 완전히 타결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음.
- TPP 협상 참여 12개국은 10일까지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실무협상을 진



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다만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 협상단 소식통은 참가국들이 내년 1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전후로 차기 회담을 여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 익명의 소식통은 FT에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이견을 없애느냐가 TPP 협상 타결의 최대 현안이라고 전했다.

● <中, 대만 '방공구역' 비판에 "선동 말라">(12/12, 연합뉴스)

-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관리칭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진당(대만의 제1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공공의를 갖고 양안 대립을 선동하고 있다"며 "민족 입장을 상실한 언행은 반드시 양안 동포들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고했다.
-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여 온 대만정부가 점차 '강공 모드'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일종의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됨.
- 애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주권문제와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혔던 마잉주 총통은 지난 5일 중국의 조치가 양안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추가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내년 방위비 2.8% ↑ ...아베정권 들어 2년 연속증액>(12/13,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방위예산을 전년보다 2.8% 늘어난 4조 8천870억 엔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위협' 등을 고려,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을 상정한 신장비 조사비,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방위성에 상시 배치하기 위한 시설 정비비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
- 이로써 일본 방위비는 아베 정권 들어 2년 연속 증액되게 됐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2014~2018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 향후 5년간의 방위비도 2011~2015년도 방위비보다 1조 2천억 엔 늘어난 24조 6천700억 엔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 <미국, 싱가포르에 전투함 2척 추가 배치 계획>(12/13,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응옌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12일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2척의 전투함을 싱가포르에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과 싱가포르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미군 전투함 순환배치에 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 첫 배치



된 연안전투함 프리덤호는 7개월간의 임무를 완료했으며 2016년 말까지 최대 4차례의 전투함 배치가 예정되어 있음.

- 한편 헤이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및 이에 따른 영향을 논의했다면서 중국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을 이행하지 말 것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

● <中, 실전배치 앞둔 쟈-10B 전투기 '과시'>(12/13, 연합뉴스)

- 대만 왕보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들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전투기인 14일 쟈-10B의 비행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일제히 게시했다고 보도했음.
- 쟈-10B 전투기는 중국 공군이 그동안 써왔던 러시아제 AL-31FN 엔진 대신 자국산 타이항 엔진을 탑재했으며, 중국 군 당국은 이 전투기의 작전 능력이 미국 F-16C/D 전투기나 프랑스 미라주 2000-5보다 낮다고 밝히고 있음.
- 대만 언론은 중국이 쟈-10B의 시험비행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일본 등 주변국에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했음.

● <日·아세안 정상회담 결산...쉽지않은 中포위망 구축>(12/15, 연합뉴스)

- 일본과 아세안간 특별 정상회담이 14일 도쿄에서 개최됐으며, 당초 일본은 이를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큰 공을 들여왔음.
-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해상 안보와 '비행자유와 안전확보' 협력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끌어내 아세안과의 결속을 일단 확인했지만 중국을 지칭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빠졌으며, 일부 아세안 정상은 회담에서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는 아세안 가맹국들을 위해 향후 5년 간 2조엔의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음에도 아세안에는 중국과 친밀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있어 실제 대응에서는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임.
- 아베정권이 일본의 새 외교안보 이념으로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와 관련해서도 "아세안 정상들은 기대를 표명했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음.
- 따라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등에 대처해야 하는 아세안과의 공조를 통한 일본의 대중 포위망 구축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셈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러 아무르주, 북 노동자 쿼터 축소"(자유아시아방송, 12.11)
 -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가 내년도 북한 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 해보다 26% 이상 줄이겠다고 북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달 12,13일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에서 북러 노동자 교환 협정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그룹 제4차 회의를 개최
 - 11일 아무르 현지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무르스카야 프라브다'에 따르면 지난 달 열린 양국 간 회의에서 러시아 측이 이 같은 계획을 북한 측에 통보
 - 신문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러시아 아무르주는 올 해 2천990개였던 북한 노동자용 비자 쿼터, 즉 할당량을 내년에는 2천205개로 26%(785개) 감축할 계획을 밝혔는데, 주된 이유는 올 해 북한 노동자용으로 할당된 쿼터(주로 별목공)를 70%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것
 - 반면 북한 대표단은 쿼터를 소진하지 못한 이유가 러시아 측의 관료주의 행정 탓에 노동허가서 발급 지연 등 복잡한 입국 절차로 인해 노동자 파견이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
 - 북한 대표단은 특히 구체적 사례까지 들며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러시아 측은 특정 국가에만 법 적용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다며 일단 난색을 표명
 - 한편 북측은 올 해 81명인 농업 분야 노동자 파견 확대를 요청했고 아무르주는 현지 농업 분야 수요를 감안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

- 북한, 北인권행사 보도한 데일리NK에 '반공화국모략실'(데일리NK, 12.12)
 -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세계인권선언 65주년...北인권개선은 걸음마' 기사를 보도한 데일리NK에 대해 '반공화국모략실'이라며 강하게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통하지 않는 북한인권 소동, 이제는 학생들까지 내세워'라는 대남 비난글에서 "'북인권학생연대' 자체가 민족반역자들의 자식들이나 군사파쇼독재잔당의 후예들, 학생의 모자를 썼지만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도박과 범죄행위로 타락한 쓰레기들로 이루어졌다"면서 "인권이란 개념도 모르고 인권불모지가 어디인지(어디인지)조차 분간 못하는 것들"이라며 힐난



2. 북한인권

- "北인구 32% 영양실조...인권은 정치와 무관"(연합뉴스, 12.9)

 -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북한의 중앙통계국(CBS)이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지원을 받아 최근 발표한 영양실태조사보고서(NNS 2012)에 근거하여 북한 전체 인구의 32%가 영양실조 상태로, 북한의 굶주림 지수는 100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
 - 그는 "대북지원에 있어 '지원'과 '중단'의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대북 지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박경서 유엔 세계인권도시 추진위원장은 예술, 체육, 종교 등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사회를 통합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 박 위원장은 "인권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유엔은 인권 증진을 빌미로 북한을 코너에 몰아 혼내주려는 것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이날 토론에 앞서 북한이탈주민 두 명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 "탈북자 인권침해 20% 中서 발생...中정부, 책임져야"(데일리NK, 12.10)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김상헌)가 10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센터에서 개최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침해 실태' 세미나에서 NKDB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자 20명과 국내 탈북자 300명 및 'NKDB 통합인권 DB'의 4만 6713건의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인권 피해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19.8%를 차지
 - 보고서는 재중 탈북자의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 강제송환·인신매매·성폭행·임금착취·불법감금과 폭행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
 - 이에 대해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 피해의 20%에 해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중국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 다만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대단히 많은 인권피해를 입었지만 북한에 가서 겪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것"이라면서 "중국이 적어도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

- '중 탈북자 복송 중단' 전 세계 8천명 서명(자유아시아방송, 12.11)

 -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소재 중국대사관 측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 중단을 촉구하는 전 세계 28개국 8천여 명의 청원서를 전달
- 이 단체의 수잔 솔티 대표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청원서에 지난 9월부터 8천여 명이 서명해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힘.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엔 난민지위협약국으로서 중국 내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돼 고문, 강제구금, 처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 솔티 대표는 북한과 같이 세계인권선언에 나열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
- **英美 전문가,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나선다(데일리NK, 12.12)**
-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열린북한방송이 공동주관한 '2013북한인권국제 회의'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COI 활동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
 - 기조연설로 나선 구(舊)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Sir Geoffrey Nice QC) 경은 "가해자들을 심판하고 희생자들에게는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하게끔 하는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며 탈북자들의 증언 수집과 기록을 강조
 - 발표자로 나선 제라드 겐서(페르세우스전략 대표 · 국제법 변호사) 씨는 "국제 사회가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태만을 부려왔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
 - 베네딕트 로저스(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팀장) 씨는 ▲유엔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증대 ▲유엔 안보리에서 버마(미얀마)와 같이 북한 문제를 영구적인 의제로 채택 ▲위성사진을 통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 진행 ▲북한 정권의 재외자산 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국과 연계 등을 주문
 -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향후 제출될 COI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인권 침해를 유엔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특히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는지, 자행되었다면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
- **하태경 "장성택 처형, UN인권 규약 위반...UN 개입해야"(머니투데이, 12.13)**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장성택 즉결 처형과 관련, 북한이 가입한 유엔(UN) 인권규약 및 결의안을 위배했다며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즉각처형특별보고관이 즉각 조사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
 - 하 의원은 "이번 장성택 처형 문제는 안보보다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에 초점을 맞추고 북의 인권 탄압에 유엔과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또한 "북한은 '생명의 존중'을 다루고 있는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 '탈북자관심'은 탈북자가 국경 부근에서 중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비밀 설치된 일람을 통해 공안당국에 체포된다며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

3. 탈북자

- **탈북자 명단 들고 재입북 시도…항소심도 실행(뉴스1, 12.9)**
 - 북한에 넘길 탈북자들의 명단을 챙겨 재입북하려한 20대 탈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행이 선고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재입북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자 A(26)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힘.
 -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내린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파기할 정도로 가볍지 않아 A씨와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
- **하나원-북부지방산림청, 탈북자 정서안정 지원 협약(뉴스1, 12.12)**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소장 김형석)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12일 북한이탈주민 정서안정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 안성 하나원에서 체결
 -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정서안정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과 북부산림청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키로 함.
 - 또 일반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숲을 활용한 휴양, 치유 체험 장소 제공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을 약속
- **"희망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성황(경기일보, 12.12)**
 -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13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가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1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몰리는 등 성황리에 종료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취업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드림(dream)! 희망 드림(dream)!'이라는 주제로 11일 수원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 개최
 - 이번 취업박람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NH농협, 신세계푸드, DHC, 홈플러스 등 대기업과 식품제조업, 유통, 육가공, 제품 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및 온라인 업체 등 총 72개 업체가 참가해 구인활동
 - 북한이탈주민 1천여 명은 이날 새벽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 박람회장은 온종일 북새통
 - 김문수 경기지사는 "전국의 2만5천여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남한사



회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그들의 아픈 곳을 찾아내 감싸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 사기 대출받아 재입북 시도...50대 탈북자 등 3명 구속(연합뉴스, 12.15)
 -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로 억대의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힘.
 -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김모(55·2007년 탈북)씨를 구속
 - 또 사기대출을 도운 브로커 송 모(43·2006년 탈북)씨를 사기 혐의로, 김 씨의 밀항을 도운 이모(41·2007년 탈북)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 김씨는 10월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이용, 한 보험사로부터 2억6천 만원을 사기 대출받아 인천항을 통해 재입북하려한 혐의와 5월 재입북 하려다 경찰에 검거된 정모(45·5월 구속)씨가 도피자금을 대출받게 돕는 등 탈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 절도죄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탈북한 김씨는 한국에서 1억2천만 원짜리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 운송업을 하다 일거리가 없어 빚만 늘자 재입북을 결심
 - 대출 브로커 송씨와 사기 대출을 공모해 도피자금 1억2천만원을 모은 김씨는 자신이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을 알고 이씨를 통해 밀항을 계획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
 - 김씨는 탈북 전인 2006년 북한 대남공작부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 박모(48·여·2004년 탈북)씨의 딸(당시 16세)을 볼모로 박씨에게 재입북을 권유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경찰 관계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탈북자 가족을 볼모로 재입북을 종용하는 등 지속적인 공작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입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 안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KAL기 납북 44년, 北일방 주장에 정부는 뭐했나?"(데일리NK, 12.11)
 - '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대표 황인철)'는 11일 1969년 북한에 의해 자행된 KAL기 납북납치 사건 44주년을 맞아 1인 시위를 열고 이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



-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외교부·통일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억류돼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북한의 일방 주장에 우리 정부의 공식 반박 브리핑을 요구하는 탄원서 전달식도 진행
- 황 대표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회피성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관한 국가적 책무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독 NGO, 내년 상반기 대북지원(자유아시아방송, 12.11)
 - 독일의 국제자선단체 휴메디카(Humedica)는 올해 두 차례 북한에 식량과 의료품을 보냈고 내년 상반기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이 단체의 패트릭 카마디 식량지원 국장은 올해 상반기 독일 정부 지원금과 일반 모금으로 마련한 각종 의료용품과 유아식 등 구호품들을 북한에 보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
 - 카마디 국장은 지원 물품에는 병원 침대와 휠체어,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 도구들, 그리고 아동 접종용 의약품과 아기들이 먹는 유아식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급
 - 구호품들은 독일 군대를 비롯해 지방 병원, 그리고 의료용품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며, 아기들을 위한 유아식은 독일의 낙농업 등 농장 업체들과 유아식 생산 업체들의 지원으로 마련
 - 카마디 국장은 추가 대북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지원 요청을 받으면 구호품을 보낼 지역과 규모를 결정한다고 설명
- 유럽연합 올해 18만 달러 대북지원(자유아시아방송, 12.12) [붙임 1]
 -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주의 지원사무국(ECHO)은 올해 13만 3천 유로, 미화로 약 18만 달러를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12일 공개한 '대북지원현황자료 (Factsheet)'에서 밝힘.
 - 유럽의회 인도주의 지원사무국의 올해 대북지원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진행
 -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지원사무국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지난 7월과 8월의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 약 5천 명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했다면서 1995년 이후 유럽의회의 인도지원사무



국이 대북지원으로 집행한 예산이 약 1억 3천500만 유로, 미화 약 1억 8천600만 달러라고 밝혔다.

- 유럽의회 인도주의 지원사무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 주민을 돕는 데 사용한 예산은 약 970만 유로, 미화 약 1천300만 달러에 이릅니다.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엔의 식량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에 850만 유로, 미화 약 1천1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영국의 민간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150만 유로, 미화 약 2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올해 7월 국제적십자사에 13만 3천 유로, 미화 약 18만 달러를 지원

● "국제사회 대북관심 지원 줄어"(자유아시아방송, 12.12)

- 국제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점차 줄어들게 했다고 강경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보가 설명
- 강 차장보는 이날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터티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북한 정권이 거듭 시행하는 핵실험과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지원을 하지 않게 한다고 지적
- 강 차장보는 인도지원 상황이 정치적 시안과 별개로 다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
- 강 차장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

● 캐나다 "내년 초까지 북 식량지원 없다"(자유아시아방송, 12.13)

- 캐나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인 2013 회계연도 동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
-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의 니콜라스 도이어 대변인은 지난여름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기금(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으로 3만 캐나다 달러, 미화 약 2만8천 달러를 캐나다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이 없다고 언급
- 지난 10월 유엔이 북한 전역에서 실시한 작황 조사에 캐나다 국제개발청 요원들도 합류했으며 북한의 식량 상황이 긴급히 지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고 도이어 대변인은 설명
- 캐나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8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3만 달러로 눈에 띄게 감소
- 도이어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도이어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의 2014회계연도의 대북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의 진행한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IFRC 대북예산 집행률 66% 그쳐(자유아시아방송, 12.13)**

- 국제적십자사가 지난해 재난대비 등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조달한 기금의 실제 집행률이 66%에 그침.
- 국제적십자사(IFRC)가 최근 (12월 5일) 갱신한 국가별 '2013 기금 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재난재해 대비용 지원 사업의 올 해 예산 약 665만 스위스 프랑(약 749만 달러) 중 약 660만 스위스 프랑(약 743만 달러)이 확보돼 99%의 기금 확보율을 기록
- 이처럼 기금 마련이 성공적인데 비해 실제 예정된 사업의 시행을 통한 기금 집행률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
- 국제적십자사의 '2012 개발 사업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된 북한 지원 사업과 관련한 기금(약 645만 스위스 프랑, 약 726만 달러) 중 66%(약 441만 스위스 프랑, 약 496만 달러)만 실제 집행
- 이 기간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재해에 대응해 집행된 약 122만 스위스 프랑(약 137만 달러)을 합해도 대북 지원 기금 집행 총액은 약 561만 스위스 프랑(약 631만 달러, 일반 관리 항목 제외)
- 국제적십자사는 이처럼 대북 지원 사업용 기금의 실제 집행률이 낮은 배경으로 북한 내부의 기술, 인력, 그리고 설비 부족 등을 제시했으며,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해, 정치적인 이유와 국가 안보상 문제로 인해 예정된 기금이 철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

● **유럽연합 '대북 긴급 식량 지원 필요 없어'(미국의 소리, 12.13)**

-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12일 발표한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국 전문가들의 자체 평가와 유엔의 식량과 영양 상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감안해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 또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황이 지난 몇 년간에 비해 나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는 여전히 만성적인 영양 부족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들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 한편 인도지원사무국은 올해 7월과 8월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응해 13만2천유로, 미화 18만2천 달러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했으며, 이 자금으로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수재민 5천 가구에 가정용품과 깨끗한 식수가 제공됐다고 설명

● **'유엔개발계획 북한사무소 사업활동 감독 미흡'(미국의 소리, 12.13)**

- 유엔개발계획(UNDP) 북한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UNDP 북한사무소가 북한 내 활동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함.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5가지 문제가 제기



됐으며, 이 가운데 2 가지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제기

- 보고서는 먼저, 북한사무소가 북한 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평가 계획에 분기별과 연간보고서 준비, 현장방문 실시, 관리감독 계획 준비 등이 포함돼야 하지만 북한사무소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
- 또한 북한사무소의 수표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유엔개발계획은 바로 현금화할 수 없고 은행에 예치해야만 하는 수표를 발행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사무소는 감사 기간 중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수표를 780장, 액수로 87만 달러어치를 발행했으며,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북한 계약업자들에게 지불
- 보고서는 관리감독 문제와 수표 관리 문제 등 2가지 문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북한사무소는 물론 유엔개발계획 전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시안이라고 지적
-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사무소가 '내부통제규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지 직원 모집의 어려움, 자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표준 절차의 부족 등 3가지도 문제제기
- 그러나 전반적으로 북한사무소 감사결과는 최고 등급인 '만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위기관리 과정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고 잘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 북한사무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
- 유엔개발계획의 북한사무소 감사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을 대상으로 올해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실시

8. 북한동향

- 특이 동향 없음



[붙임 1] ECHO, Factsheet DPRK,

European Commission |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PRK ECHO FACTSHEET

Facts & Figures

Humanitarian aid since 1995:
EUR 135 million in for over 130 projects

In 2013:
EUR 132 520 in response to floods in July-August 2013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ECHO's Regional Support Office Bangkok
Tel.: (+66 2) 255 1036
Devrig Velly, Food Assistance Expert, Devrig.Velly@echofield.eu

Mathias Eick, Regional Information Officer, Mathias.Eick@echofield.eu



Even in years of a good harvest much is lost due to poor storage – EU/ECHO

Key messages

-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responding to humanitarian needs in DPRK since 1995 with over EUR 135 million in total.
- The 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ECHO, together with its partner organisations, is providing relief assistance when an immediate response is needed, such as during and following flooding, drought or food crises.
- ECHO experts regularly assess the situation in DPRK in order to respond to the most urgent need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Based on their conclusions and on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food and nutrition situation, there is currently no need for emergency assistance. However, chronic undernutrition remains a public health problem.

Humanitarian situation and needs

Background

The UN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 report of November 2013 states that food production has slightly improved, reducing the food gap to its lowest in many years (340 000 tons of cereals, out of



which 300 000 are expected to be imported). Most households are still food insecure, though.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faces serious logistic challenges, so households usually rely on their own production on the farm and in kitchen gardens, state shops, formal markets and commodity exchanges. The nutrition situation is better than in previous years, but overall rates and micronutrient deficiencies are worrying: even if child undernutrition has steadily declined over the past decade, additional efforts are required to enhance their condition. Stunting among them is still high, at 28%.

Major challenges

Based on ECHO humanitarian experts' assessment and the most recent UN report on the food and nutrition situation in DPRK, there is currently no need for emergency assistance in that regard.

Nevertheless, extreme weather conditions have posed further challenges in the last two years. In general, the situation remains fragile and subject to deterioration in case of further shocks:

In July-August 2012, floods triggered by heavy rains hit the areas of South Pyongan, North Pyongan, Kangwon, North Hamgyong, South Hamgyong and Jagang. The government reported more than 115 dead and around 85 000 displaced. Over 47 000 hectares of farmland were severely damaged.

In July-August 2013, floods in the North West of the country destroyed thousands of homes and affected around 800 000 people (source: OCHA). Many families also lost personal items such as clothes, blankets, cooking and eating utensils. Temporary shelter was a pressing need, and there was an increased risk of water-borne diseases such as diarrhea. Water and sanitation represented an important concern.

The European Union's humanitarian response

Funding

In response to the floods in July and August 2013, the European Commission released EUR 132 520 that were us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IFRC) to help with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tems, the provision of safe water and the promotion of hygiene with some 5 000 affected and displac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Pyongan and North Hwanghae provinces. Similar assistance was provided through the IFRC following the floods in mid-August 2012.

In total, the European Commission's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ECHO has committed over EUR 135 million in humanitarian aid to some 130 projects since 1995, with especial focus on food assistance, the improvement of health services and access to clean water and sanitation for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ECHO supported projects 2012 - 2013

